다르게 짓고 바르게 짓는 삼일건설
건축사업 조경사업
토목사업 주택건설
PARAVIEW

전남매일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
(주) 백양실업
TEL . 061) 392-7900

제8142호 대표전화 062-720-1000
창간 30주년 30th SINCE 1989. 6. 29
(음력 5월 3일) 2019년 6월 5일 수요일

‘군 공항 이전’ 통합적 협력체계 필요하다

시민추진협,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국방부·광주시·전남도 접근법 ‘제각각’
추진 방향 재점검 갈등 해결방안 모색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이전 대상 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공항이전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간 진지한 토론과 통합적 대안 창출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송갑석·천정배·김동철·권은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채일병 대표회장과 김진표·천정배· 김동철·송갑석·최경환 국회의원,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주시민 8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최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무안·영암·해남·신안 등 4곳을 대상으로 설명회 관련 의견을 수렴했지만,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국방부의 설명회 추진과 관련해서는 ‘꼭 해야한다’는 것에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시기와 장소를 놓고 의견이 다르다.

국방부는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는 당장 지자체장 협의 등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는 숨 고르기를 통해 지역 반대 여론이 잠잠해지면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학린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위원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통합적 협력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류일영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으로 상생·발전의 장을 열자’,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방향’, 허익배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김학린 연구위원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수원, 광주의 추진 현황과 상황은 다르다”며 “국방부는 대구, 수원 경험을 교훈삼아 광주 군 공항이전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광주는 통합적 협력 구도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이해 관계자 간 진지한 토론과 통합적 대안 창출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 전남도의 노력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 대상을 확대해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와 대안 창출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류일영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은 “군 공항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적도 있지만, 주변이 도시화하면서 소음피해가 급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전 외에는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며 “이전이 늦어질수록 피해 비용이 많이 늘어나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은 “이전 사유를 상세히 알지 못하면 비행 안전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음피해,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당연하다”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발제문을 통해 “관계 지자체와 협조해 우호적인 협의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 지역 단체장과 공식적인 협의 후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면으로 이어짐

/황애란 기자

수영대회 글로벌 홍보 캠페인 이낙연 국무총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영택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 사무총장이 4일 오후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글로벌 홍보 캠페인’ 행사에 참석해 세계지도가 그려진 캔버스에 지문 날인 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 올 최고치 갱신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농축산물 값에 이어 공업제품과 서비스까지 치솟으며 소비자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5로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0.5% 각각 상승했다.

광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1월 부터 103.87·104.22·104.01·104.42로 오름세를 보이며 5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0.5%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3%,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은 1.3% 상승한 가운데 쌀(10.2%)·돼지고기(8.5%)는 상승했으나, 배추(35.2%) ·고등어(15.7%)는 하락했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도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105.23으로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0.7%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0.6%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2.3%, 전년동월대비 1.0% 각각 하락했다.

/송수영 기자

위기의 전남 오리산업 스마트 팜으로 넘는다

도농기원, 1차 실증서 출하율·소득↑

전남도가 지역 특화 축종인 오리를 대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팜 기술개발에 나섰다.

1차 실증 과정에서 출하율과 출하소득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매년 반복되는 AI(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응한 표준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4일 전남도와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남은 현재 모두 217개 농가에서 383만7,000 마리의 오리를 사육 중이다. 전국 점유율 50%로 국내 최대 오리 산지다.

하지만, 축산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AI 등 악성질병이 매년 되풀이되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대외개방에 대응한 생산비 절감도 다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농기원은 위기에 빠진 오리 사육 농가를 위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팜 개발을 추진중이다.

생산비 절감 등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목표로 지난 2016년 해남 2개 농장에서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작업을 벌였다.

해남 2개 농장 1차 실증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해 온도, 습도, 정전 및 화재관리 등 오리농장 내·외부환경과 사양관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또 농장 안팎의 CCTV를 통해 차단방역과 오리 상태를 관찰·분석했다.

ICT 기술 도입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출하율은 96%에서 98%로 2%포인트 증가했고, 출하소득도 1회 당 1,240여만원에서 1,560여만원으로 23% 증가했다. 암모니아냄새가 6ppm에서 5.4ppm으로 8% 감소하고, 깔짚수분도 60%에서 56%로 4% 감소하는 등 축사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농기원은 이 같은 분석 자료를 토대로 올해 나주와 담양 농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표준모델 개발에 나선다.

우선 스마트 팜 육용 오리의 고온스트레스 경감과 육질 향상을 위해 천연물질을 이용한 오리 사료첨가제 효과를 규명한다.

도농기원은 최적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스마트 팜 100개 농장 확산시 1회당 소득 7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근산 기자

현충일 대체휴무 내일 신문 쉽니다